

우 의장 “늦어도 7월 3일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돼야”

‘30일 본회의’ 與 요청 수용 안해
“서둘러 협의를” 여야 합의 주문
與 “청문회로 의혹 대부분 해소”
野 “인준되면 장관 검증 무용지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요청한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7월 3일까지 여야 협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오늘이 인사 청문 경과보고

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정부의 첫 총리도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 합의로 인준한 바 있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역대 새로운 정부 출범 시 여야 간 이견이 있음에도 총리 선출에 뜻을 모아주신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가동이 지연된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30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며 야당의 인준 처리 협조를 호소했다. 문 원내수석은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게 나온 것이 없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일 때

도 당론으로 (윤석열 정부 첫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일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통과시켜준 적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 상정해서 총리 인준안을 통과 표결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의장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30일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들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는 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이고 조작 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고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청년·탈북민·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민주혁신회의 전국대회 참석한 박찬대·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대 원의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9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텐더홀 농성장 방문한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맨오른쪽)가 지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금호타이어 국회 대책위 구성 제안

지역경제 심각…선제적 대응 필요
“정부, 고용위기지역 신속 지원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사진)는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대우위니아 사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광주 지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서 원내대표는 “광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가전산업이 동시에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 화재와 대우위니아 계열사 5개 기업의 파산 또는 매각은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년 전 대우위니아 사태 당시 중소기업특별기부금이 광산구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올해 11월 종료될 예정”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



구조 속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300여 명의 직접 고용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함께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 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조속히 광주공장 화재 복구 로드맵과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주주인 더블스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2018년 금호타이어 매각 당시 약속했던 내용에 기반해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위를 구성해 시민대책위원회와 공조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조속한 실사와 지정, 제도적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광산구가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실사를 마치고 지정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 ‘촉각’

시 “미분양 심화” 의회 “도심 활성화” 시민단체 “조례 부결·대안 마련을”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구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무기명으로 재표결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광주 도심 상업지구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주거·위락시설 혼재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미분양 심화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는 지난 23일 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광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했으나,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용적률 상향은 현재 주택보급률(105.5%)을 고려할 때 미분양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용적률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부족”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도심 상인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용적률 완화가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

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540%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반시설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조례가 가결될 경우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기준을 다시 낮추는 등 재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540%를 낮추는 등의 재개정이 추진된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만약 가결되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안도걸, 2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억8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에는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업 예산 2813억원이 반영되도록 앞장섰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확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재정운동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차 추경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민생 현장에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